

광주·전남 통합 대세론, 앞선 '3차례 무산'과 다른 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에 오른 가운데 앞선 3차례 실패와 달리 '통합 대세론'이 형성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을 두고도 출마자들 사이에 '찬성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최종 통합까지는 공론화를 어떻게 진행할지, 특별법안에는 무엇을 담아낼지에 가장 큰 관심이 될 전망이다.

6일 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1986년 11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분리된 이후 40년 새 모두 세 차례(1995~1998, 1999~2005, 2020~2023년)에 걸쳐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첫 두 차례는 전남도청이 광주 동구에서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맞물려 통합 논의가 제기됐으나 청사소재지와 공식 반발, 주도권 갈등 끝에 무산됐고, 세 번째 논의는 군공항 이슈와 중앙 정부의 지원 부족, 여기에 법적 기반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그러나 올해 통합 논의는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크고, 속도도 빠르다.

우선, 새 정부와 두 단체장의 협업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가능케 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수도권 1급 체제와 지방소멸을 화두로 던지며 연발연시 거침없는 통합 행보에 나섰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호응하며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등과 청와대 오간까지 갖기로 하면서 통합론은 급물살을 탔다.

정부의 지원책, 특히 파격적인 재정지원은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모두 전국 최하위권인 '궁핍한 광주·전남'에 중·장기적으로 전문학적 재정지원과 함께 각종 타당성조사 면제, 지역특화형 특례, 현안사업 지원은 더 없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국비 지원에 가중치를 줘야 한다'는 정부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부와 두 단체장 3박자, 정부의 파격 지원, '레짐 파워'까지 출마자, 정치권, 여론 "통합 찬성"... 공론화, 특별법안이 관건

세 번째 통합 시도가 무산된 정부 임기 반환점을 넘긴 상황에서 제기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쉽지 않았던 반면 이번엔 정부 출범 1년도 안돼 소위 '레짐 파워'가 가장 강력한 시점에 제기돼 행정 동력을 얻기 쉽다는 해석도 나온다.

강 시장은 이날 시의회 간담회에서 "그 동안 광주나 전남이 반대하거나 정부 지원이 크지 않아 통합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엔 여러모로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고, 김 지사도 지난 2일 통합 선언문을 발

표하면서 "중앙 정부의 의지 부족"과 미미한 혜택을 지적한 바 있다.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점도 긍정적 학습 효과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론도 대체로 힘을 실고 있다. 광주 시장, 전남지사 출마 예정자를 비롯해 광주·전남 국회의원 대다수가 통합에 찬성하고, 이 중 상당수는 올해 6월 통합단체장 선출에도 공감하고 있다.

광주·전남 최다선(5선) 박지원 의원은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고, 6년 전 통합을 공개 제안했던 이용섭 전 시장도 "빠를수록 좋다"며 조기 통합에 찬성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도민 10명 중 7명 꼴로 통합에 긍정적이거나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통합 추진이 전에 없는 속도감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주민 공론화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걱정도 없지 않다"며 "광주와 전남이 진정한 완전 통합체로 나아가기 위해선 공론화와 더불어 내실 있고 촘촘한 특별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광춘 기자

광주 남구 가족센터, 연간 이용자 7만명 훌쩍 일반주민 4만명·다문화가족 3만명 이용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인기

광주 남구 관내 육아와 돌봄 공간인 남구 가족센터 연간 이용자가 7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공공기관 중심의 지역 돌봄체계 핵심 거점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31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올해 남구 가족센터를 다녀간 방문객은 12월 중순 기준으로 7만925명에 달했다. 일반 주민은 4만78명이고, 다문화 가족은 3만847명이었다.

남구 가족센터가 큰 사랑을 독자지하는 이유는 핵가족화 시대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공동 육아와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세상을 여는데 밑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곳에서는 가족관계와 가족 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까지 4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수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분야 프로그램은 주민 3만2,455명이 이용할 정도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다. 이곳 센터에서는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와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다문화 인식 개선을 목표로 공동육아 나눔

터와 가족 축제, 고향 방문, 명절 체험, 아동·청소년 클라이밍 강습 등 18개 세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데 앞장섰다.

이와 함께 가족 구성원의 부재와 상황적 위기 등으로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구 구성원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가족 돌봄 분야 프로그램 이용자만 연간 1만9,142명으로 집계됐는데, 해당 분야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그동안 온 가족 보듬과 1인 가구 솔로 투게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한부모가족 가사 서비스 등 7가지 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가족 사랑을 키웠다.

이밖에 남구 가족센터는 가족 특성에 따른 고충 상담과 초기 정착 등 11가지 가족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관계 개선 차원에서 부모 및 부부 역할 개선, 이중언어 교육 지원 등 5개 세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수요자 특성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족생활 분야와 가족관계 분야 프로그램 이용자는 각각 1만3,327명과 4,240명이었다. /임채일 기자

김영록 지사, 동절기 안전·취약계층 보호 선제 대응 지시

대설·한파 대비 점검회의 주재... 재난 예방·도민 안전 주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월 31일 동절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동절기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겨울철 재난 예방과 도민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 점검했다.

회의에는 전 실국장이 참석했으며, 22개 시군 부단체장은 영상으로 참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재난관리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극한기후영향으로 기상 변동성은 큰 편이다. 특히 새해 첫날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유동 인구 증가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영록 지사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도내 재해우려지역 321곳과 적설 취약 가설건축물 1만 180곳에 대한 사전 점검 상황을 살피고, 강설 시에는 제설전진기지 48곳 운영과 중점 제설구간 134개 노선(247.1km)에 대한 제설제 사정 살포 등 교

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시군과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대설·한파 대응을 위한 예산 14억 원(대설 9억 원, 한파 5억 원)을 활용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예산은 각 시군에 교부돼 제설과 한파 대응 등 현장 조치에 활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도내에서 한랭질환 추정 사망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 지사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경우 기저질환자와 치매 유병자 등은 건강 약화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밀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를 통한 안부 확인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읍면동별 1곳 이상 한파쉼터 연장 운영과 시군별 1곳 이상 응급대피소 24시간 운영 등 도민 보호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염선호 기자

광주시, 극한호우 대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추진

북구 문흥동성당·북구청사거리 등 상습침수지역 근본대책 마련

해 예방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북구 문흥동성당 일원에는 총 3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약 2만7000톤 규모의 우수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우기 전 터파기 등 기본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집중호우 때 빗물 유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해 인근 주거지역 침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청사거리 일원에는 1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약 1만2700톤 규모

의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 때 도로와 인근 상가 침수 우려가 컸던 곳으로, 사업 완료 때 교통 기능 회복과 시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도시 방재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기후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

상이 된 상황에서 도시 안전 기반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로 이어지도록 재난 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극한호우와 복합재난에 대비한 도시안전 기반시설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 재난에 강하고 일상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